

헤드라인
(요약과 압축)

빅테크 플랫폼서도 금융계좌 개설 가능

기사링크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9&aid=0004705574>

본문
(본문 내용 복사)

[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
자체 계좌로 송금 & 결제
앱에서 포트폴리오 추천 받고 자산배분까지 진행 할 수 있어
`페이`에 30만원 후불 결제 허용]

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

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

- 금융플랫폼에서 계정(사실상 계좌) 발급
- 이체·결제 등 계좌 기반 서비스 제공
- 계좌 잔액에 대한 이자는 없음
- 사업자 허가제(자본금 200억원, 주식회사)

마이페이먼트(지급지시전달업) 도입

- 앱을 통해 모든 계좌 결제·송금 등 이체 실시
- 사업자 등록제(자본금 1억5000만원)

소액 후불결제 허용

- 1인당 30만원·사업자 직전 분기 결제 규모 50% 이내

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신설

- 금융위원회가 기관 허가 및 감독권 보유
- 한국은행 연계 업무는 금융위 감독에서 제외

앞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 빅테크 업체나 각종 '페이'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든 금융플랫폼을 통해서도 계정을 발급받고 급여 이체,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각종 금융 계좌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. 다만 플랫폼에서 발급한 계정은 은행 계좌와 달리 잔액에 대해 이자는 붙지 않고, 대출 등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. 여기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기존 빅테크 업체들도 참여가 유력하다.

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(전금법)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. 금융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고, 이 개정안이 윤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.

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,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, 이용자 보호 강화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
윤 의원 측은 "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**종합지급결제업 도입**"이라며 "금융플랫폼에서도 은행 계좌에 가까운 '계정'을 발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변화"라고 말했다. **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발급된 계정을 통해 급여 이체, 카드 대금·보험료·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**

다만 금융플랫폼을 통해 개설된 계정을 마치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로 오인하는 행위는 금했다. 예컨대 '네이버 통장'과 같은 광고는 할 수 없다. 또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은행법이 아닌 전금법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계좌 잔액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고 대출 등 여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. 아울러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**사실상 은행 계좌 서비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수준의 신용 확인 의무가 부과**된다. 종합지급결제 사업은 업무 성격을 감안해 정부 허가제로 정해졌다. 정부는 이번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자금이체업 사업자 중 최소 자본금 200억원 등 각종 요건을 감안해 향후 선정할 계획이다.

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(마이페이먼트)도 추가로 도입했다. **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에게서 결제·송금을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**을 말한다. 종합지급결제업에는 마이페이먼트업도 포함된다. 마이페이먼트는 **개인이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·통제하는 마이데이터(내년 2월 시행)와 함께 큰 시너지를 낼** 전망이다. **앱 하나로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 조회(마이데이터)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고 이에 따른 자산 배분·이체(마이페이먼트)까지 할 수 있게 된다.** 이 때문에 '손안의 디지털 금융 비서'로 불린다.

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. 차후 시행령에서 **개인에 대한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, 사업자는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 대비 50%로** 정해질 예정이다. 향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빅테크에는 **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**한다. 빅테크가 **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조치**다. 전자지급거래 청산은

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·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.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·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는다. 다만 개정안에서 '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국은행과 연계된 업무(한은이 금융결제원에 차액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, 유동성 리스크 등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업무)에 대해서는 금융위 감독·검사에서 제외한다'는 문구가 부칙으로 들어갔다.

[전자금융거래법(전금법) 개정안]

1. 종합지급결제업 도입

- 은행에서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 빅테크 업체나 각종 '페이'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든 금융플랫폼을 통해서도 계정을 발급받고 급여 이체,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각종 금융 계좌 기반 서비스 사용 가능
- 사실상 은행 계좌 서비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 확인 의무가 부과

2. 지급지시전달업(마이 페이먼트) 도입

- 마이 페이먼트: 이용자에게서 결제, 송금을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
- 앱 하나로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 조회(마이 데이터) 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고 이에 따른 자산 배분, 이체 (마이 페이먼트)까지 할 수 있게 된다

3. 소액 후불 결제 기능 허용

-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
- 개인에 대한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, 사업자는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 대비 50%

4.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

-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

정리

추가조사할
내용 또는 결과



✓ 빅테크

-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
- 송금과 결제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, 보험 판매 시장까지 진출 영역을 넓히고 있음

✓ 기존금융사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

- 내부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외부적으로는 ICT(정보통신기술) 기업과의 합종연횡을 추진
- 인공지능(AI)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제휴상품 출시를 준비

연관기사 링크

빅테크 vs 빅뱅크 vs 핀테크...미래금융 패권전쟁 불붙었다

<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0071949241>

금융사, 상생안 찾기...전략 준비 박차

<https://www.sisaweekly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2945>